

허위·과장으로 ‘낙고’, 의료윤리 ‘모른체’ 법안은 표류 중

고(故) 권대희 씨 유가족 “병원의 마구잡이식 공장수술 피해자”
의료법 위반 광고, 적발된 의료기관 두달간 278곳 달해
‘권대희 법’ 발의 하루 만에 철회, 아직까지 논의 없어

김창호 기자 k.c_hoxx@khu.ac.kr

‘모여라! 수험생!’ ‘피어나라 나의 20대!’ ‘수능 끝, 예뻐 시작!’ ‘수능 그 퀘이트!’

실제 성형외과가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광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구들이다. 성형으로 예뻐지고 잘생겨졌다는 사람들의 전후 비교 사진을 내건 지하철 역사, 건물 광고도 빠질 수 없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광고도 다수다. 매해 수능이나 방학 기간이 다가오면 전국 성형외과들은 화려한 광고와 이벤트들로 20대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성형을 결심하는 학생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성형 정보를 제공하는 한 어플리케이션의 누적 가입자는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리서치 전문 업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올해 2월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외모와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20대의 34%(257명 중 87명)가 “성형수술을 경험했거나 고려했던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학생 사이에서 성형은 하나의 ‘미용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

성형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한편, 성형수술로 인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8일,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던 고(故) 권대희 씨는 ‘14년 무사고’를 자랑했던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았다. 권 씨는 두 달 동안 강남 일대 유명하다는 성형외과 8곳을 모두 직접 돌아다니며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중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권 씨는 곧 중태에 빠졌고, 중앙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49일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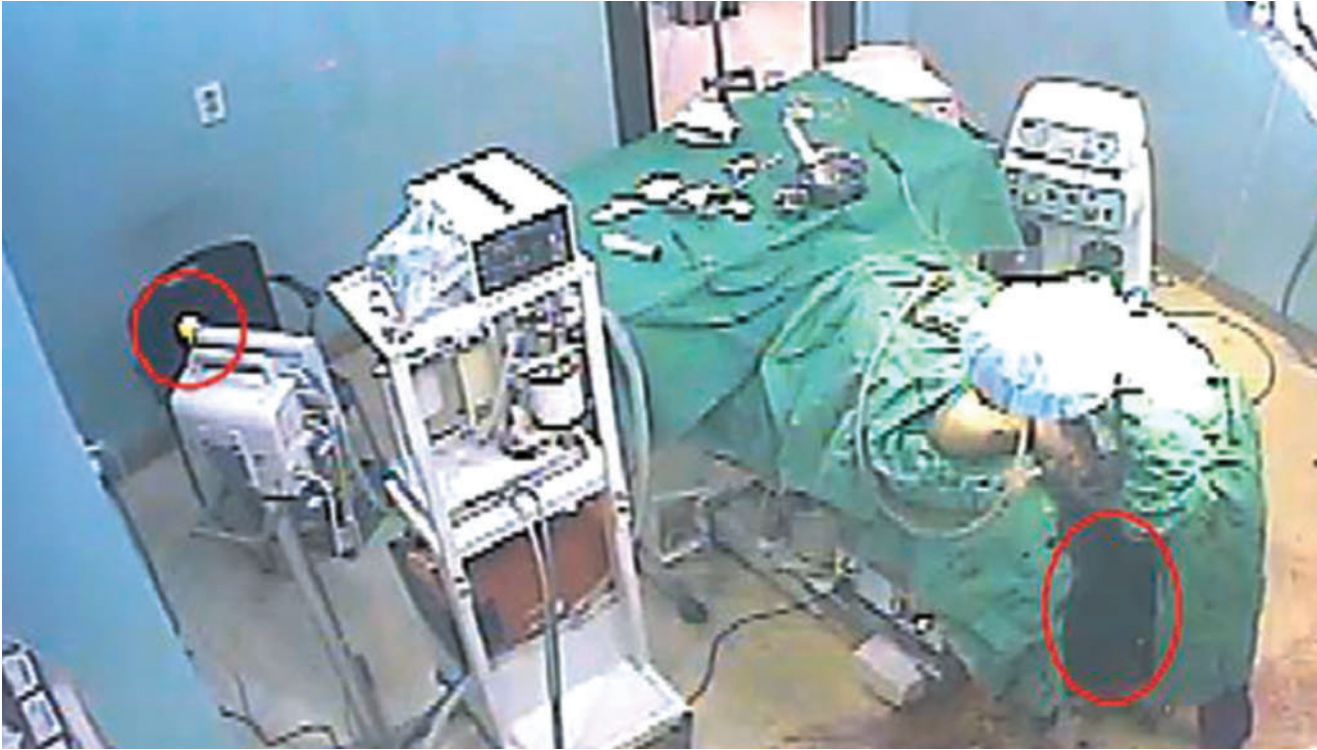
끝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 따르면 사인은 ‘수술부위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였다.

권 씨의 어머니 이나금 씨는 “우리 아들은 병원의 마구잡이식 공장수술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 씨가 아들에 얹힌 죽음의 진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수술실 CCTV 영상을 입수한 덕분이었다. 7시간이 넘는 수술 영상에 담긴 수술실의 실태는 참담했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끝까지 수술을 책임지겠노라 약속했던 병원장은 권 씨의 뼈를 절개한 직후 사라졌다.

전문 감정 기관의 CCTV 영상 분석 결과 수술실에 남아 있던 간호조무사가 홀로 권 씨를 지혈한 시간은 33분에 달했고, 그동안 권 씨가 흘린 피의 양은 3,500cc가 넘었다. 13번에 걸쳐 수술실 바닥에 쏟아진 피를 밀대로 닦아 내기도 했다. 끝까지 책임진다면 원장도, 마취과 의사도 권 씨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 알고 보니 해당 병원장은 권 씨 이외에도 다른 2명을 동시에 수술하고 있었다.

의료윤리 위반행위, 성형계 고질병

피해자는 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해 ‘있으나마나’라는 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4년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및 코 수술을 받던 고 등학생이 뇌 손상 장애로 인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성형외과의사회의 실태조사 결과 유령수술(환자가 상담을 통해 직접 수술을 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을 집도하는 행위), 대량의 수



고(故) 권대희 씨 수술 당시 CCTV 캡처 화면. 의사는 자리를 비웠고, 간호조무사가 권 씨를 지혈하고 있다. (사진=권대희 씨 유가족 제공)

면마취제 투여, 의사면허대여 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유령수술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2015년 2월에는 보건복지부가 대리수술 방지책을 내놓기도 했다. 매년 1회 이상 미용성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 행정조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미용성형 실태조사는 그 뒤로 없었다.

일각에선 허위과장광고와 유령수술, 공장수술 등의 의료윤리 위반행위를 성형외과의 ‘고질병’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제기됐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전 법제이사이자 유튜브에서 ‘닥터 벤데타’ 채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웅 원장은 “권대희 학생과 같은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다”라며 “유령수술과 공장식 수술 등의 생명권 침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수술대에 사람을 놓아놓고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누군가가 들어와 신체를 절단한다고 생각해보라”며 “정말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형외과의 광고는 학생들이 성형을 결심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지난 2016년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정호영 교수팀은 대구 지역 6개 대학 신입생 1,08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대학신입생의 남녀별 미용성형수술 계획 실태 및 관련 요인)에서, ▲외모 지상주의적인 사회 분위기 ▲TV 등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의 영향 ▲성형수술 의료계의 비즈니스 전략을 학생들이 성형을 결심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목했다.

김 원장은 성형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매체와 병원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그는 “현재 한국과 같이 신체 부위를 마치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상품처럼 묘사하는 성형광고는 모두 외국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이런 광고들을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실제 온라인에서 광고하는 의사 중에는 3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인 이도 있으며, 지금도 거짓 광고를 통해 수많은 대학생이 죽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위과장광고 판단 기준도 미비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허위과장광고 등의 행위는 한국에서도 불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의료인이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광고가 아닌지 사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2019년 1월부터 두 달간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행사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총 1,059건의 광고물과 278곳의 의료기관이 적발된 바 있다. 이는 전체의 절반 정도나 되는 비율이다.

김 원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판단기준이 불분명

하고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100명을 성형해 99명이 죽고 나머지는 한 명만 성공한 경우, 그 한 명의 결과를 광고하는 행위를 현행 제도는 제재하지 못한다”는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의 의료광고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15년 넘게 의료소송을 담당해온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대표변호사는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의사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다 해도 면허 정지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에는 반대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안 철회 의원 “의사들이 항의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일명 ‘권대희 법’은 작년 5월 14일, 안규백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루 만에 철회됐다.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의 의원이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그 뒤 6일 만에 법안이 재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법안을 철회했던 5명의 국회의원들은 “의사들에게서 많은 항의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꼭 성형을 해야 한다면, 까다로운 환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수술 여부와 병원을 결정하는데 있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 변호사는 “특히 온라인의 광고성 정보가 아닌 논문 등의 전문적인 자료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가 받으려는 수술의 평균 수술 시간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보조자를 동반하는 게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